|  |  |
| --- | --- |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

|  |  |
| --- | --- |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사진부 |
| 발 신 | 국민개헌넷 사무처 (담당 : 김재운 시민참여팀장(010-9156-0917)  이재근 공동사무처장(010-9727-4035), forr2018@pspd.org) |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2/14 개헌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설날홍보캠페인 |
| 날 짜 | 2018. 02. 13. (총 5쪽) |
| **보 도 협 조 요 청** | |
| **개헌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및 설날홍보캠페인**  국민개헌넷,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등 전국 951개 단체 참여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등 2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일시 : 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서울역 동편 대합실 입구 | |

1. **취지와 목적**

*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2018년 1월 16일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단체 공동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전국의 951개 단체[[1]](#footnote-0) 는 설 연휴를 앞둔 2월 14일(수),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시도, 총 22개 지역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거리홍보활동을 주요 철도역과 터미널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서울은 오전 10시 서울역 동편 대합실 입구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역, 용산역, 강남버스터미널에서 거리홍보활동을 진행합니다.

1. **개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 시민사회·지방자치 단체의 설맞이 공동 기자회견 및 전국동시다발 거리 홍보 활동**

* 공동 기자회견\_서울
* 일시장소: 2018년 2월 14일(수) 오전 10시-10시 30분, 서울역 동편 대합실 입구 광장
* 공동주최: 헌법개정과 선거제도개혁 촉구 전국 951개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단체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정치개혁공동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
* 주요내용 : 참가자 인사말, 개헌 및 정치개혁 촉구 발언
* <거리홍보 활동-서울지역>
*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역, 용산역, 강남터미널
* 지역별 거리홍보활동과 기자회견
* 지역 거리홍보 활동 : 서울 포함 22개 지역, 주요 교통거점: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 전주, 청주, 충남, 거제, 고양/파주, 광명, 군산, 목포, 부천, 안산, 양평, 천안(자세한 지역일정은 추가로 공지)
* 지역별 공동기자회견은 지역별 보도자료 참조
* 문의 : 김재운 국민개헌넷 시민참여팀장(010-9156-0917)

1.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각 지역별 홍보물 배포 일정 및 지역 담당단체**

**# 붙임자료 2: 2월 14일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 1 : 각 지역별 홍보물 배포 일정 및 지역 담당단체**

|  |  |  |  |  |
| --- | --- | --- | --- | --- |
| 지역명 | 배포장소 | 배포시간 | 지역담당단체 | 단체담당자 |
| 서울 | 서울역 | 11시 | 국민개헌넷(주권자전국회의) | 최병현 팀장 |
| 서울 | 용산역 | 11시 | 지방분권개헌추진본부 | 김재운 팀장 |
| 서울 | 강남버스터미널 | 11시 |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 이승훈 사무처장 |
| 대구 | 동대구역 | 14시 | 대구참여연대 | 강금수사무처장 |
| 대구 | 동대구역 | 14시 | 대구경실련 | 조광현 처장 |
| 인천 | 인천터미널 | 13시 | 인천평화복지연대 | 김명희협동처장 |
| 부산 | 부산역 | 12시 | 부산참여연대(정의당) | 노태민(정의당) |
| 충남 |  | 수시로 | 충남연대회의 | 이상선대표 |
| 경기 |  | 수시로 | 경기연대회의 | 이정희 운영위원장 |
| 부산 |  | 수시로 | 부산경실련 | 윤정선 부장 |
| 군산 |  | 수시로 | 군산경실련 | 서재숙 간사 |
| 거제 | 고현버스터미널 | 10시 | 거제경실련 | 배동주 간사 |
| 안산 |  | 설이후 | 안산경실련 | 고선영 국장 |
| 광명 | 철산역 | 12시 | 광명경실련 | 최미영 부장 |
| 목포 |  | 설이후 | 목포경실련 | 마대현 간사 |
| 광주 | 광주송정역 | 10시 | 광주경실련 | 김창재 간사 |
| 양평 |  | 수시로 | 양평경실련 | 여현정 국장 |
| 전주 | 전주역 | 10시 | 전주경실련 | 최수진 국장 |
| 천안 | 천안동부광장 | 10시 | 천안경실련 | 이수희 부장 |
| 청주 |  | 11시 | 청주경실련 | 이병관 국장 |
| 대전 | 대전역 | 11시 | 대전경실련 | 서해림 부장 |
| 부천 | 부천북부역 | 12시 | 민주노총 부천지부 | 김락경 |
| 고양파주 |  | 수시로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김병민 |
| 세종 |  | 설이후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김지훈 |
| 수원 | 수원역 | 10시 | 경기연대회의 | 이정희 운영위원장ㅇ |
| 청주 | 성안길입구 | 수시로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이두영 |

**#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는 김재운 국민개헌넷 시민참여팀장(010-9156-091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2 : <기자회견문>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 내자!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국회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상태에 빠져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려놓고도 실질적인 협상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새해에도 제 할 일을 방기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는 6.13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공약이 지켜 지리라 장담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일 수밖에 없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주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소일해서는 안된다.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 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 새로운 선거제도를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전국의 951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 넘어 한 자리에 모여 국회와 정부에 민심을 담은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첫째,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회를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 선거제도 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등을 논의함에 있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첫째,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함께 대통령도 책임 있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통령도 개헌논의를 시작하되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개헌논의로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ㆍ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51개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단체 일동**

1. 참가단체 명단은 [링크](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olidarity&document_srl=1546366&listStyle=list) 참조 [↑](#footnote-ref-0)